

# 목포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불공정 시비 일어

### 사업 특성 감안하지 않은 특정 업체 염두에 둔 입찰 장비·SW 분리발주, 과도한 관급자재 사양 명시도 의혹 시 "조달청 의뢰 문제 없다...모든 업체 참여 가능하다"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마감한데 이어 최근 우선협상 자격자를 선정했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 적격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범과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목포시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1600여대의 CCTV 정보자료를 전남도와 소방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 등 총 11억3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최근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입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과도한 비중의 관급자재 사양을 명시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업체로 인정받은 25개 업체가 요구하는 장비의 사양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관급자재로 설계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제시된 장비의 사양을 감안할때 일부 업체로 특정된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지 모르는데 장비 사양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목포시의 입찰방식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정부의 장비기준 수칙에 맞춰 사양을 명시했으며, 기본적인 스펙만 있는 업체라면 사업 참여가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한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도입장비를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모두 의뢰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업체를 제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거리 두기 완화 첫날, 신이 난 어린이집 원생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된 12일 오전 광주 중흥동 효죽어린이공원 잔디밭에서 북구청 직강어린이집 원생들이 보육교사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사소한 시비' 이웃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2심서 감형

### 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비가 붙은 이웃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항소

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이웃 B(74·여)씨의 머리가 놓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흉기·둔기를 든 채 B씨 일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에 B씨의 집을 찾아 B씨의 아들이 자고 있던 안방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행패를 말리던 B씨의 아들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양심을 품고 부탄가스통과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들이 A씨를 붙잡고 밀쳐 방화를 막았다. 김미희기자

## 52일만의 1단계... "다행이다" vs "불안하다" 반응 갈려

### 자영업자·맞벌이·예비부부 등 '안도의 한숨' 일각선 "연휴 잠복기 안 지났는데 시기상조"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과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각각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 건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5일 이후 59일만, 전국은 같은달 22일 이후 52일만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노래방, 대형학원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도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

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이에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의견을 냈다. 노래방 창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이번에 또 2단계가 연장됐다면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등교를 하지 않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던 맞벌이 부부들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 한 맘카페의 네티즌 A씨는 "아직 공지가 내려오진 않았지만 요즘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한데 3~4회라도 규칙적인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며 "고민은 많겠지만 끝이 안 보이니 무한정 학교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예비신부 B(30)씨는 "2단계 하에서는 최대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하객 초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이다"라고 했다. 또 "결혼식을 올리는 연말까지 부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지 않

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너무 이른 조치 아니냐'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단계 첫날인 이날 0시 기준 누적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97명)하며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아직 추석과 개천절 연휴 잠복기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1단계로 하향한다고 하니 좀 의아하다"며 "자칫 세자리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선부터 조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경제 문제가 급한 건 맞지만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1단계는 시기상조"라며 "만일 다시 늘어나서 2.5단계,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의 한 맘카페에는 "매일 주 5회 등교하게 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연휴 지난지도 얼마되지 않아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급식도 먹게 될텐데 절대적인 청정 지역은 없기 때문에 심란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